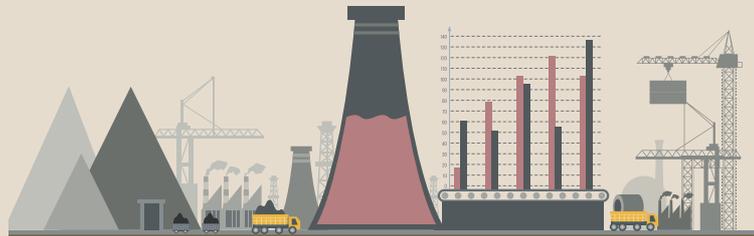


석탄화력발전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현수 _ 충남연구원장



현재 충청남도 서해안에는 총 2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53기의 거의 절반이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보내진다. 국가 전체적으로 전기 생산은 필요하기 하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문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로 발전소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분진으로 인한 대기 오염과 건강 피해,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 및 온배수로 인한 해양 오염과 어장 피해, 발전소에서 외부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송전탑과 송전망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와 지가 하락 피해 등이 있다. 항구나 산업단지, 관광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해안가 요지가 발전소 부지로 전용되면서 다른 지역개발의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말이다. 특히 석탄발전은 원료 비용이 싸지만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 2015년 국제 환경운동단체 그린피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매년 1,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이러한 피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석탄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 이를 감독하는 중앙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와 환경부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약간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정부가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최근 상황 변화가 생겼다.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조사결과가 2016년 봄에 잇따라 발표되면서부터이다. 발전소 가까이 사는 충남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중앙 언론들이, 충남의 화력발전이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앙 언론이 연일 충남의 석탄화력 문제를 대서특필하자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고, 갑자기 중앙 부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대책은 과거에 비해 분명히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고 있어서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미 계획된 석탄화력 발전소는 앞으로 계속 건설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정부가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충남 서해안지역에서만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 9기가 추가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현재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기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2기가 더 건설될 예정인 당진에서는 김홍장 당진시장이



시민들과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 농성에 나선 것이다.

석탄화력의 문제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의 과다 배출뿐만이 아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심각하다. 석탄화력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석탄화력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어냈던 석탄이 21세기 지구 온난화 위기를 맞이하여 인류의 주에너지원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다. 석탄발전의 시대가 끝나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석탄화력 증설을 고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보다 발전 단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 요금을 싸게 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충남의 석탄화력 문제는 충남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위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기 요금 구조 및 전기 생산-소비 구조,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에너지 수급 구조, 나아가 전 지구적 기후환경 대응 전략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오염 저감과 주민 건강 피해 방지 방안에서부터, 지역 경제의 친환경, 지속가능 발전 방안 모색, 우리나라 에너지 요금 및 조세 체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편, 중앙집권적 전기 생산 구조에서 지역분산형 구조로 전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탈피, 세계적 차원의 신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충남의 석탄화력 문제를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이 향유하는 반면, 사회적 비용은 발전소가 입지한 충남 지역



에 모두 전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같은 편익과 비용의 지역간 불공정 배분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동안 충남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는 무관심하던 중앙 언론이나 중앙 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 피해 문제가 대두되자 갑자기 충남의 석탄화력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수도권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는 예이다.

그렇지만 과정이 어떠했던 충남 석탄화력의 문제가 전국적 관심 사항이 된 지금이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기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 매우 복잡하게 얽힌 이 문제의 해결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결의 실타래는 어쩌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의지와 해결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합의 형성이다. ◀

